大學의 自律性과 캠퍼스내 無秩序

孫 東 鉉
(成均館大 哲學科)

1. 多元的 開放性과 自律的 秩序

오늘 우리 사회는 自律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이념이 드높이 외쳐지긴 했지만, 해방 이후 진정 시민의 자율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실현돼 왔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독재적·전횡적·권위주의적 국가 경영방식이 사회 각 부문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획일적 上意下達의 공동체 생활방식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이를 거부하려는 세력은 늘 위협시되고 억압받아 왔다. 우여곡절을 겪은 민주화운동 끝에 이제 우리는 가히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성원의 운명이 어느 정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오지 않고 이제는 성원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결정권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획일적으로 하달되던 배타적·전제적 의사가 더이상 공동체 성원에게 준수만을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지배해 오던 중앙집중적 閉鎖構造가 약화됨으로써 공동체 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가 병존하는 개방적·다원적 사회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달되는 전제적 의사에 의해 억압받아 왔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의견일수록 더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회상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이 전개되는 多元的 開放社會에 절실히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적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원적 개방사회에서는 성원 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이것이 곧 自律이다. 다원적 개방사회는 성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율의 사회다. 성원 각자의 의사와 욕구가 다양한 모습 그대로 허용되어야 하기에, 획일적 폐쇄사회에서는 중요치 않던 規範的 原理가 여기에서는 새로이 요구된다. 다양한 욕구와 의사가 다양한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서의 기본질서가 바로 그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질서야말로 획일적·전제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질서가 크게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다만 전제적 의지의 정당화를 위한 위장일 뿐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적 의지 그 자체의 강력성이다. 질서는 이에 자연히 뒤따르는 피상적 현상일 뿐이다.

다원적 개방사회에서 秩序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원적 개방사회를 가능케 하는 自律性이란 그저 타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규정되지 않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원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조정함을 말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짐을 뜻하는 것이 또한 자율성이다. 이때 만일 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따를 수 있는 自己規制의 共通値, 즉 최대공약수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원 각자는 자기규제의 폭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요, 자연히 책임의 영역을 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론바 자율적 행위들은 서로 충돌하여 상호 파괴적으로 될 것이요, 결과적으로 욕구와 의사의 다양성은 그대로 견지되지 않을 것이다.

욕구와 의사의 다양성이 깨지는 사회가 다원적 개방사회에로의 이행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개방화 과정이 종종 자율성을 부인하려는 반동적 세력에 의해 억행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가 성원 각자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수용하여 이를 공존시킬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根本的 規範原理는 바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고 의사를 주고 받는 개방적 상호교통의 기본틀인 秩序의 건지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大學의 自律性과 캠퍼스내 無秩序

다원적 개방성과 자율적 질서 —— 이것이 곧 민주사회를 지탱해 주는 원리가 아니겠는가? 상반되는 듯하면서도 상호 요청적인 이 두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 대학사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연구와 교수라는 그 본래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영역보다도 자율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대학사회가 그동안에는 다른 영역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專制的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支配되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시대를 앞서 가는 새로운 사회적 기풍을 선도하려 하는 대학인의 본성적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그것이 학문의적·교육외적·정치적 이유에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단한 민주화운동의 진원지가 대학이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학사회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이만큼의 다원적 개방성을 그에 걸맞는 자율적 질서 아래에서 만족스럽게 성숙시켜 가고 있는가? 물론 오늘 우리의 대학이 교육행정면으로 볼 때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학과 및 대학 신설, 신입생 선발, 학생정원, 대학제정 등 여러 면에서 대학은 교육행정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행정적·법제적 문제 영역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 대학 구성원이 보이는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특히 캠퍼스 내의 可視的 無秩序를 문제삼다 보니, 그것도 특히 대학생의 행동양태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장래가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윤리의 확립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대학 구성원 중 특히 大學生의 行動方式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대학생의 행동방식이 개인적 도덕의식, 공중도덕, 대인관계에서의 예의범절, 그리고 정치적 내지 공공적 성격의 문제에 관한 의사표명 및 집단행동에 있어 다원적 개방사회가 두루 요구하는 자율적 질서(또는 자율적 질서의식)의 결핍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이 근래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획일적 폐쇄구조에서 민주적·다원적 개방구조로 변모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민주화의 쟁취에 있어 이들의 투쟁적 기여는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그 쟁취 자체에 심취되어 그렇게 쟁취한 다원적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성숙시켜 나가는 건설적 도정이 自律的 秩序의 결핍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우려와 더불어 내려지는 진단이다.

그러면(대학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분적으로 적용되겠지만) 특히 대학생의 행동방식 중 자율적 질서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캠퍼스 안에서의 행태를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크

게 눈에 띄는 것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① 개인적 도덕의식과 관련되는 무질서 행태
- 시험중 커닝
-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 학점구걸 또는 청탁

② 공중도덕상의 무질서 행태
- 담배꽁초,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기 또는 침뱉기
- 강의실내 흡연
- 캠퍼스내 음주
- 고성 잡담으로 강의 방해하기
- 학교 시설물 파괴·훼손
- 교정 아무 곳에서나 공놀이 등으로 소란피우며 보행 및 강의 방해하기
- 강연, 강좌, 모임 등을 알리는 현수막, 포스터, 스티커 또는 대자보 등을 난잡하게 부착·설치하고 기일이 지나도 계속 방치
- 연구나 학업을 방해하는 운동연습
- 교직원식당 등의 무단이용
- 규정을 무시하는 캠퍼스내 차량운행 및 주차행위

③ 타인에 대한 예절상의 무질서 행태
- 교수 등 年長者에 대한 非禮, 폭언, 폭행
- 학생들 간의 폭력 위협

④ 정치적 내지 공공적 의사표명 및 집단행동에 있어서의 무질서 행태
- 캠퍼스 분위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정치집회 및 기타집회(확성기·꽹과리 등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큼)
- 학교시설물(총장실, 전화교환대 등) 점거농성으로 학교기능 마비시키기
- 집회를 위한 무단 집단 강의불참

3. 秩序意識 결여와 反秩序 의식

질서를 경시하고 규정을 무시하는 이상의 여러 행태에 공통적인 첫째 경향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個人的 혹은 集團的 利己主義이다. 이 이기주의는 획일적 폐쇄사회가 다원화·개방화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행동경향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제적 억압에 의해 나의 이익이 희생당해 왔으므로 나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이 곧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방종이 자유로 오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향으로, 고질화될 경우 민주사회의 성립 자체를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것이다.

불의에 의해 희생당한 것은 나의 이익만이 아니었으므로 正義는 단순히 이 희생되었던 이익을 되찾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있게 회복시켜 줄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위해 각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윤리상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따져 보기에 앞서 내게 혹은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먼저 헤아려 이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이러한 近視眼的 利己主義 앞에서 질서가 보편적 원리로서 견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당국에 이른바 '농성수당'을 요구하거나 '민주장학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이는 보편적 정의의 이름 아래 소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왜곡된 개방성, 왜곡된 자율성의 한 극단적 예라 할 수 있다.

질서의식의 결여에 크게 작용하는 둘째 경향은 '힘겨루기주의'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규정 내지 질서라는 기본적 규범에 비추어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관철되었느냐 좌절되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태도가 암암리에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주장이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면 물론 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행위의 정당성이 곧 그 실현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제적 억압구조의 사회에서 정의로운 주장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해 온 입장에서 볼 때, 관철되지 않은 정의란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수는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좌절의 체험에서 이 '힘겨루기주의'——힘의 대결에서 이기는 편이 正當性을 확보한다는 주의——가 태동된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성의 원리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規程 및 秩序에의 부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와 관련하여 '패거리주의'를 그 세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힘의 대결에

서 이김으로써 이익 추구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곧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게 되면, 힘의 증대를 위해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단합된 무리가 아니고 그저 힘의 증대를 위해 모아진 무리라면, 이는 '패거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 패거리에게는 利害를 달리하는 敵과 同志가 있을 뿐, 정의와 질서에 대한 집념이 없을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질서 경시의 태도는 모두 정당성·부당성, 즉 옳고 그름과 이익·손실, 즉 좋고 나쁨이 전혀 다른 두 차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혼동하거나 전자를 후자에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질서라 한다면, 질서란 유익성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의 근거가 되는 正當性의 원리인 것이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타율적 旣秩序에 대한 반감이 질서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쉽다는 점이다.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강요당했던 것이 대체로 보편가치로서의 정의가 아니었고, 바로 그 질서의 이름 아래 자율성이 박탈당해 왔었기 때문에 反秩序 의식이 자율의식 및 정의감과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에 대해, 진정한 자율성에 대해 좀더 반성해 본다면 反秩序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가 이들을 가능케 해주는 기초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캠퍼스 내의 무질서가 오직 우리 사회의 개방화·민주화와만 연관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상의 변혁이 대학 캠퍼스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실은 이에 못지 않게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人間敎育 내지 道德敎育이 차지하는 몫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식을 갖고 사회상에 눈뜨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도덕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행위의 규범이 행동방식을 크게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4. 自律性 提高와 秩序確立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캠퍼스 내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멀리는 유년시절의 청소년 도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옳은 생각이다. 다만 질서확립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글의 의도에 비추어 보자면 너무나 멀리 있는 주제일 따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대학내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 특히 개방화·민주화라는 사회상의 변화와 연관시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방안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독특한 여건이 있다고 본다.

개인도덕적 내지 사회윤리적 관점에 있어 대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학내에서는 물론이고 학외에서도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고 본다.

첫째, 대학생의 自律的 자기규제 能力에 대한 신뢰가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대학생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는, 순수한 중립적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도덕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은 아직 사회생활을 위한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교육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敎育的 考慮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다른 이유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民主化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대학생이라 보고 이를 상찬하는 것이 또한 그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타당한 것이요, 이로 인해 대학생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의 행동방식이 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여건까지도 감안해서 캠퍼스 내의 질서확립을 강구해야 할 일로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첫째는 學事管理에 있어 嚴正性을 철저히 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와 교수가 대학의 근본과제임에 틀림없을진대 교수와 학업에서의 무질서는 대학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교수가 먼저 강의와 학습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도 이와 관련하여 수강과 시험 등에서 규정과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누구보다도 교수가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訓育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대학생은 실제로 대학에 와서야 본래적 의미에서의 人間敎育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교수는 그저 지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서적·도덕적 영역에서도 '가르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학 직후 가능한 한 학생과의 접촉을 늘려 대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성실하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학교당국과의 갈등과 충돌에 있어 학교당국은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과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분명히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학 전체의 균형있는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학생들과의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마땅하지만, 교육적 또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正當性 여부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행위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限界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학생들이 다원적 개방사회에서 자율적 질서를 견지케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캠퍼스 내에서의 무질서에 대해 대학 구성원 중 學生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 현상과 의식상의 배경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살펴 보았다. 우리가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캠퍼스 내의 무질서를 논의했다 해서 오직 학생만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캠퍼스 내의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遠因은 대학 전체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대학내 문제들의 총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음에 논외로 제쳐 놓았던 법제적·교육행정적 문제도 따로 상세히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 현상에 대한 논의도 관련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독립적 주제의 논의는 여기에서 전개시킬 수 없겠지만, 다만 자율성의 제고와 질서의 확립은 상호요청적인 것인 만큼 대학에 질서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大學人에게 自律性을 허용해 주는 일이 선행요건이라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시각을 대학 내에 국한시켰을 때 우리가 또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學校 運營 전반에 있어서의 합법성·합리성이 학교내 질서 확립의 보이지 않는 定礎가 된다는 점이다. 앞서 학사행정의 철저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사행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이 전체적으로 엄정한 기강 아래에서 이루어질 때, 다른 가시적 학내 질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이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투시될 수 있도록 모든 결정과정이 公開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럴 때 학내 구성원은 모두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자율성의 실천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달자면 학생들의 질서 확립을 위해 별도의 운동을 벌인다든지 한다면, 이는 가급적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학교당국이 주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을 언급해 둔다. ☞